

# “사람도 힘든데”...폭염 장기화에 축산·양식농가 시름

하루에 오리 1500마리 죽어  
전남 폐사 전년보다 3배 증가  
악취 민원 탓 축사 환기 못해  
“시설 개선 정부 지원 절실”

“가장 더운 날엔 하루에만 1500마리의 오리가 더위로 죽었다. 사람도 죽을 날씨인데 오리라고 말짱하겠나. 매년 봄만 되면 올 여름에는 몇마리나 건널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28일 오후 찾은 나주시 세지면의 한 오리 농가에선 오리들이 더위에 허덕이며 힘겹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3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임종근(57) 한국오리협회 나주시부장은 “6만여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올 여름 하루 최대 1500여마리가 폐사했다”고 토로했다.

임 부장은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여름철 선풍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해 화재 위험에 대한 불안도 크다. 선풍기 지원사업을 통해 사육장에 더 많은 선풍기를 배치한다면 교대로 가동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햇빛을 막지 못하는 일반 비닐을 열차단비닐로 전면 교체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개폐식 지붕 열 차단제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오리가 더위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무더위로 전남에선 지난해보다 3배 많은 가축들이 폐사했고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폭염 피해에 축산·양식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폭염피해예방지원사업



28일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에 위치한 오리 농가에서 오리들이 무더위 속에 물을 마시고 있다.

을 시행,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을 투입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가축사료효율 개선제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낙농가 환풍기 지원 사업 등으로 가축 폐사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예년보다 심한 폭염으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부터 이날까지 19개 시군 135농가에서 가축 19만8162마리(△닭 17만6096마리 △오리 1만4356마리 △돼지 771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31억여원인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지난해 여름 폐사한 가축(6만9000마리)의 3배에 달하는 피해 규모다.

이에 지역 축산업계는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돼지 농가의 경우 악취 민원으로 인해 축사 환기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억기(59) 대한한돈협회 나주시부장은 “지난해 여름보다 돼지 폐사량이 2배 이상 늘었다”며 “돼지들은 한 마리당 1일 평균 3.3kg의 사료를 먹어야 하는데 더운 날씨 때문에 1.7~2.2kg의 사료만 섭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악취로 인한 환경법 위반을 막기 위해 산업용탈취제·미생물제 등의 악취저감제를 물과 사료에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비로 마련하기 때문에 축산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돼지 축사의 경우 환기 시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환경부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 악취 기준이 법정수치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조치가 이뤄진 다.

실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내려진 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악취 민원에 의한 환기 제한 등이 가축 폐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농가와 인근 주민 양측이 원활한 합의점을 마련해 축사의 환기량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 분석했다.

윤진현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축사 내에서 수증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안개로 가축들의 체온을 일시적으로 떨어트리기도 하는 등 유연한 대처를 시도하고 있지만 폭염이 심하면 오히려 내부 온도가 더 올라가 역효과가 나게 된다”며 “여름철엔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농가에서도 정상적인 사육 규모의 운영과 적절한 분뇨 처리 등을 통해 환기 시에도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남지역은 지난 2018년 가축 97만마리, 2019년 37만마리가 죽는 등 여름철 폐사가 급증했다. 이후 피해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올 여름 지난해의 3배 이상의 폐사 피해를 겪으며 새로운 대응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날씨가 예년보다 더워져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며 “내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양식장의 피해도 잇따랐다. 앞서 이달 6일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8일까지 도내 어가 86곳에서 양식어 42만9000여마리가 폐사했다. 피해 추산액은 117억원이다. 지난해 고수온주의보 기간이 9월 22일까지 이어진 것을 봤을 때 올해 피해 규모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 친환경수산물과관계자는 “수온이 높으면 현장 지도를 통해 양식 밀도 조절과 먹이 공급 조절을 하고 산소발생기·액화산소 차광막·면역증강제 공급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워낙 객체 수가 많아 모든 양식장을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법인카드 유용’ 도연학원 전 이사장 벌금 1000만원

3년간 아들 등 1500만원 지출  
변호사비 ‘업무상 배임’은 무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진고 운영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학교법인이 채용 비위 내부 제보로 불거진 법적 다툼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인카드 개인 유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명진고 운영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사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2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총 1500여만원 상당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법인이 있는 광주가 아닌 서울·부산 소재 음식점이나 백화점, 병원, 호텔,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해외 유학 중이던 아들이 한국에 머무른 기간에 집중돼 있었으며, 실제 법인카드로 결제한 렌터카 업체의 예약자·운전자 모두 A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또 법인카드를 A씨의 아내가 참여하는 연구회 세미나 회비

를 지출하기도 했다.

A씨는 “법인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고 개인카드와 구별하지 않고 구분별하게 사용한 것 같다.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적도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A씨가 도연학원 교원 부정 채용 제보 교사의 해임·임용 취소 등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법인 내 비위 비판성 보도·글 관련 명예훼손 고소 등에 변호사 선임료 등 1억4700여 만원을 지출한 사실 역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검사는 A씨가 재판을 남용한 교원의 징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도, 이후 이어진 법률 대응에 법인 운영 목적에 반하는 고소 등 행위를 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재판장은 “법인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에 비춰 A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423차례, 1500만원 넘는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학교법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지 기자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업무 전환 갈등 심화

노조, 내달 6일부터 규탄집회  
공단 “규정 따른 정당한 조치”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환경직 직원 업무 전환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9월6~18일까지 광산구청과 공단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월31일 공단이 시행한 환경직 직원들의 업무 전환으로부터 시작했다.

공단은 지난 2017년 제정 이후 관련 직원들에게 적용돼 왔던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규정상 환경직 운전원이 1년간 50% 이상 자기과실비율 차

량사고 2건 이상, 전체 사고 발생 건수가 4건 이상인 경우 탑승원으로 전환하도록 적시돼 있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 7월31일 운전원 8명이 탑승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노조는 부당 전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기업 노조는 “업무 전환은 불이익변경 취급규칙에 해당되며, 해당 조항이 전체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규정의 적용 시기와 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커지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이 지난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시행되면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왜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고 올해 갑자기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규정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형평성

에 맞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공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노사 및 노노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게 매우 안타까운 공단의 현실이다”며 “현 경영진들의 소극적인 노사 소통 방식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는 차량 안전사고 증가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의 낮은 안전사고 점수와는 무관하게 공단 규정에 의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경직 업무 추진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업무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떤 노조에 치우침이 없도록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고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 전남 모든 초등학교생 매월 10만원 지급

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확대

인구감소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내년부터 전남 모든 초등학교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지급하

고 있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22개 시·군 전 지역 초등학교생에게 10만원씩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정부 사업 도입 또는 전남도 및 기초 지자체 간 유사 사업 통합,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22개 시·군 초등학교생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교생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주비 기자